

오피니언

11

사설

중운위 자격 박탈 논의, 회칙 정비 계기로

우리학교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세 단과대 학생회장의 연이은 불참으로 인한 중운위 자격 박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서울캠 총학생회칙 제31조 5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차기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 드러난 핵심 사안은 불참 그 자체라기 보다는 해당 불참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할 회칙이 부실하다는 데 있다.

미술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회장들은 모두 실습 등의 이유로 연속 3회 이상 불참했다. 이에 대해 중운위에선 불참사유서를 제출 받고, 이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현재 회칙에서는 ‘특별한 사유’의 예시도, 사유서 제출 및 심사의 절차도 명시돼 있지 않다. 회칙의 모호함은 자칫 사유 인정을 주관적 판단의 영역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

치대의 경우 실습 시간이 부족 학생회장과도 겹쳐 대리인을 세우는 것조차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은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상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중운위는 단순 보고체가 아닌, 학교 자치의 방향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주요 기구다. 해당 단과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연속적으로 불참한다는 것은, 학생 구성원의 대의권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리인’에 대한 기준조차 회칙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부학생회장은 대리 참석 시 의결권이 인정되지만, 그 외의 임원은 의결권 없이 참석권만 주어진다. 이마저도 회칙이 아닌 관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습, 공적 행사 등으로 대표자가 부득이하게 불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최소한 단과대 학생회 임원 중 누군가는 대리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아도 말이다.

치대 외에 다른 단과대의 경우 왜 대리인을 세우지 않았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회칙상 근거가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인지, 혹은 책임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그 원인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자치의 구조적 허점을 점검하고 회칙을 정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울캠 총학생회장은 “이전 총학생회에서 논의돼 왔었지만, 구성원들간의 의견이 달라 쉽게 회칙을 개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실습이나 질병, 군 복무 등 반복되는 불참 사유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유서 제출 또한 의무화해야 한다. 대리인의 자격과 권한 역시 회칙에 근거

를 명확히 뒤야 한다.

단과대 대표는 단지 회의 참석자 이상의 존재다. 학우를 대신해 발의하고 의결하며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할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 일부 대표자는 우리신문의 질의조차 회피했다. 이처럼 중운위 구성원 박탈 여부가 달린 중대한 상황에서 소통을 외면한 행위는 자치기구 대표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의 문이다.

세 단과대 학생회장에게 대한 처분은 가까운 시일 내 중운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단과대 학생회장은 자신이 맡은 자리의 무게를 다시금 인식하는 것이다. 단과대 대표는 학생 구성원 전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리다. 불가피하게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 대안을 마련하고, 회칙이 부족하다면 그 개정을 요구하는 것 역시 대표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세시봉

학폭과 대입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종합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고 한다.

엄벌주의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마련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더글로리> ‘연진이’의 역할이 컸다. “사과하지 마. 사과받자고 10대도, 20대도, 30대도 다 걸었을까? 넌 벌 받아야지. 신이 널 도우면 형벌, 신이 널 도우면 천벌.” 문동의 복수 이야기로 흘러가는 더글로리를 보며 사람들은 분노에 공감하고 ‘정의’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다.

대중의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은 ‘연진이’ 대학 못 가는 학폭 대책’으로 곧바로 나타났다. 물론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실제 사례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가 단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맞학폭(쌍방 학교폭력 대응 방식)’이 하나의 대응 공식으로 자리 잡은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학폭 조치 사항에 대한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처분에 대한 경중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합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각 대학의 2026년도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기록은 엄격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학생부 교과(추천형)와 실기위주(체육인재) 전형에서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서면사과) 기록만 있어도 지원 자격을 제한하며, 고려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도 일부 전형에서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지원을 막고 있다.

강력한 처벌이 없어서 연진이를 못 막았을까. 더글로리가 일으킨 사회적 반향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이다. 다만 그 형태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엄벌 대책이 된 것은 아쉽다.

청소년기는 아직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예방이나 교화에 대한 고민 없이 제도화된 낙인만 남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연진이’를 양산하게 될지 모른다. 정의의 이름으로 내린 처벌이 또 다른 불균형과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금 필요한 건 뜨거운 분노보다도 차가운 성찰이다.

취재수첩

합리적인 AI 활용을 위해서

김규연 기자
imgonnadot@khu.ac.kr



“AI를 권장하는 교수님과 반대하는 교수님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생성형 AI, 대표적으로 챗GPT는 대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든든한 동반자로 이미 자리매김했다. 수업이나 과제, 논문 작성까지 AI 손길에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정작 교내에서는 AI 활용에 대한 구성원 간 합의가 만족할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교육 현장 일선에서 AI의 무분별한 사용과 지나친 의존 현상을 목격한 교수들이 AI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가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학교도 AI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대학에서 AI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반

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AI 위원회의 운영 계획을 보면, AI 교육에 대한 논의나 언급이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서 출범한 공대 AI 위원회의 성과 교류회에서는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관점 및 우려 사항이 논의됐다.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AI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거고적 차원의 AI 시스템 구축을 예고한 만큼, 현장의 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 때문이다.

학내 구성원들은 AI 활용 문제의 핵심이 결국 관련 교육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AI 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고 의미 있는 시작점이다. 다만 충분한 이해와 합의 없이 성급히 AI를 도입한다면 오히려 현장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AI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AI 위원회가 교육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실질적인 AI 시스템 구축을 이끌어갈길 기대한다.

만평 연구생활 장려금 수혜자 확대 필요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